

# '소통과 신뢰로, 시민과 함께하는 완산' 구현 더욱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 나선다

### 전주시 완산구, 신년 브리핑 통해 구정 운영 5대 기본 방향·15개 핵심 목표 제시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국승철)가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구민이 행복하고 더불어 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구는 구민의 삶이 한층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맞춤형 대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구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폭넓게 전개할 계획이다.

국 승철은 13일 열린 완산구청 신년 브리핑을 통해 '소통과 신뢰로, 시민과 함께하는 완산'을 슬로건으로 한 2026년도 구정 운영 5대 기본 방향 및 15개 핵심 목표를 제시했다.

5대 기본 방향은 △현장에서 답을 찾는 '소통 행정' △함께 나누고 돌보는 '동행 복지' △일상 어디서나 안심되는 '안전 실현'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 순환' △일상 속 활력 넘치는 '생활 경제'이다.

먼저 구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소통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한걸음 더 다가가는 생활밀착형 현장 행정 실현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추진 △공정성과 책임으로 이루는 투명 행



국승철 완산구청장이 13일 완산구청 신년 브리핑을 통해 '소통과 신뢰로, 시민과 함께하는 완산'을 슬로건으로 한 2026년도 구정 운영 5대 기본 방향 및 15개 핵심 목표를 제시했다.

정 구현에 공을 들인다. 이에 따라 구는 중앙 중심의 현장 순찰제 및 현장 행정의 날을 확대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과 1주민자치센터 1특화사업'을 통해 주민 참여를 더욱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디지털 민원서비스를 강화하고, 토지대장 디지털화와 지적재조사 사전 안내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을 실현한다.

구는 '함께 나누고 돌보는 동행 복지' 구현을 위해 △안전적이고 지속가능한 복지안전망 강화 △전 생애 계층별 더 세심한 생활맞춤형 복지 실현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민·관 복지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정했다.

일상 어디서나 안심되는 '안전 실현' 분야의 경우, 구는 △위기 대응 선제적·신속 대응능력 제고 △주민 체감형 생활안전 기반 구축 △칭걸하

고 안전한 위생 관리 체계 확립을 목표로 삼아 현장을 중심으로 필요성 있는 안전 행정 구현에 행정 역량을 모은다.

도로·교량·하수도 등 생활안전 기반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위생 취약 분야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해 주민체감형 안전 환경을 구축해 나간다.

동시에 구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생활환경 조성 △시민 생활권 중심의 녹지 환경 조성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하천 관리 체계 강화를 추진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갖춘 완산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구는 일상 속 활력 넘치는 '생활 경제' 구현을 위해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활력 제고 △고용 연계를 통한 생활 안정 지원 △체계적인 세원 관리로 탄탄한 세입 기반 확보 등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국승철 완산구청장은 "현장과 시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2026년 한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완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 전주시, 주거급여 기준 완화·전주형 주택바우처 병행 추진

전주시가 더욱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주거급여의 문턱을 낮추고 주거사각지대 가구를 위한 전주형 주택바우처도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주거급여와 전주형 주택바우처 사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먼저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임차가구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주거급여는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이 상향 조정돼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1인 가구는 7.2%, 4인 가구는 6.5% 인상됐으며, 임차 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가구별로 2만1000원에서 최대 3만9000원까지 인상됐다.

특히 4인 가구의 경우 지원 기준이 월 292만 원에서 월 311만 원 이하 가구까지 확대돼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임차가구는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게 되며, 전주시(4급

지)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최대 월 21만 원, 4인 가구는 최대 월 3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해 주택수선유지급여가 지원된다.

지원 한도는 △경보수 590만 원(3년 주기) △중보수 1095만 원(5년 주기) △대보수 1601만 원(7년 주기)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정부가 지급하는 기초주거급여에서 제외되거나 중지된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지원하는 전주형 주거급여 '주택바우처'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민간 월세 가구로, 4인 가구 기준 월 389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 수급자 △긴급복지(주거비) 지원 대상자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사회주택 등 공공지원주택 입주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권희성 기자

## 전주시, 태평·추천대지구 개발 규제 합리화 추진

### 지구단위계획 개선키로

전주시가 준공업지역인 여의동 태평 지구와 팔복동 추천대지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시는 노후화로 인해 활용도가 저하된 태평·추천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공업지역의 도시 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준공업지역 내 대지의 최대 개발규모(1000㎡) 적용 예외 항목을



신설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개발 규모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태평·추천대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운영해오며 해당 구역 내

준공업지역이 산업구조 변화와 도시 여건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저이용·공동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시는 준공업지역 내 도로의 폭이 넓은 도시계획도로 주변과 일반공업지역 경계에 위치해 개발 여건이 양호한 지역까지 획일적으로 개발 규모가 제한되면서 토지이용이 저해되고 개발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개선키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준공업지역 내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폭 10m 이상의 일반도로 또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해 있거나 일반공업지역과 연계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 시 최대 개발 규모 제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해 현재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달 중 변경된 내용을 고시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해당 지구단위구역 외 다른 구역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규제 등을 지속 발굴해 순차적으로 정비해나갈 방침이다. /권희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교육연수가 13일 전주 디메이호텔 마제스틱볼룸에서 열렸다.

### 전주시, 권익위와 16일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전주시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전주시민들의 생활 속 고충 해결을 위해 시민들을 찾아 나선다.

시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완산구청 8층 강당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이 전국의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역 주민의 고충과 불편 사항을 청취·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중심의 국민 권익구제 서비스이다.

전주시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을 비롯해 관계 기관 담당자들이 참여해 종합적인 민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상담 분야는 △행정·교육 △세무 △복지 △노동 △주택·건축 △교통 등 생활 전반의 민원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일상에서 겪는 불편 사항과 고충에 대해 상담이 가능하다. /권희성 기자

### 전주시, 돌봄 공백 해소 '야간 연장돌봄 사업' 시행

전주시는 올해 맞벌이 및 긴급상황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야간 연장돌봄 사업은 지난해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인한 아동 사망사건에 대응한 범부처 대책의 일환으로, 퍼지 못할 사정으로 귀가가 늦어지는 보호자들이 아동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용 대상은 보호자의 긴급상황 시 돌봄이 필요한 6세~12세 아동이며, 이용 시간 기준 2시간 전까지 사전 예약 신청을 통해 주중 오후 10시 또는 밤 12시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은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063-227-5479)과 연장돌봄 참여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1일 최대 5000원이다. 단, 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권희성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 합동교육연수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교육연수가 13일 전주 디메이호텔 마제스틱볼룸에서 열렸다.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와협의회 주최로 열린 이날 연수는 남관우 협의회장(전주시의회 의장) 등 도내 시·군의회 의장 및 의원, 직원 등 2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 윤리와 법적 책임, 소통과 홍보 역량 등의 특강으로 진행됐다. 정책 특강은 용인시가흥구 선거관리

위원회 이창술 사무국장이 강사로 나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대한 주요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이해충돌방지법 체크 포인트 등을 설명했다.

소양 특강에서는 한국산업기술원 지부장인 이수이 교수가 정치인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 기술, 청중을 사로잡는 연설기법에 대해 교육했으며, 국회의장 행사기획 자문관인 탁현민 대표는 '기획과 연출, 정치에 집중하다'라는 주제로 의정 성과 홍보전략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권희성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마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sup>2</sup>,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